

독자·저자·출판사 모두 의욕 상실, 출판환경·지원정책 과감한 개선 급선무

“책 파는 사람으로서 자긍심을 잃은 지 오래 됐습니다.”

지난 2001년 11월 5일 서울 신촌에서 열린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임시총회 자리에서 한 대학서점 대표가 흥분하며 내뱉은 말이었다. 괜히 장사가 안돼서 한 소리가 아니었다. 이들의 경험에 의하면 수강인원이 40명이 넘는 과목에서 팔리는 책은 한두 권에 불과했다. '20명이 팀을 짜서 1인당 5퍼센트만 맡아 복사를 하면 법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르치려는 친절한(?) 교수의 사례가 도마에 오르기도 했다. 학생들을 바른 길로 이끌어야 할 선생(교수)이 불법을 저지르는 방법을 가르치고 있다는 게 적잖은 충격이었다. 급기야 같은 달 23일 다시 모인 회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학술출판 못 하겠다'며 출판등록증을 반납하고 학술전문도서 출판중단을 선언하기에 이르렀다.

그로부터 22개월이 지난 오늘 우리나라 학술전문도서 출판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알아보는 것도 의미 있는 작업일 것이다. 우선 학술전문도서 출판중단선언 이전의 일이지만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의 등장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센터는 그동안 짐작만 할 수 있었던 불법복사의 실태와 그 피해 정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학술도서협회의 움직임을 끌어냈다.

다음으로 학술 전문도서 출판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복사전송을 규제할 수 있는 '출판및인쇄진흥법'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특히 이 법 '제25조(불법복제 간행물 등의 수거·폐기 등)와 제26조(권한의 위임·위탁)에서는 그동안 한국복사전송권관리센터가 해오던 불법 복사복제 단속 활동을 법적으로 명시화하고 불법 간행물에 대해 행정지도를 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했다.

세 번째로 기초학문 분야의 도서출판을 위한 지원금이 대폭 늘어났다. 우선 문화관광부에서 199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우수학술도서 지원도서의 예산이 늘어났다. 지난 1997년까지 63종 2억1,000만 원이던 것이 1998년 IMF체제 이후 출판위기를 맞으면서 241종 15억9,000만 원으로 크게 늘어났고 2002년에는 다시 1억 원이 늘어 약 400종 도서에 대해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의 강희일(다산출판사 대표) 명예회장은 “박지원 문화부장관 시절 5년 이내에 50억 원까지 지원을 해준다는 약속을 받은 바 있다”며 “문화부 예산이 줄어드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지만 당시 함께 있었던 오지철 씨가 현재 문화부 차관으로 있으므로 이러한 요구를 지속적으로 수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문화부보다 늦게 시작했지만 현재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는 곳은 대한학술원이다. 교육인적자원부의 지원을 받아 작년년부터 시작한 학술원은 첫 사업으로 1999년~2001년

까지 3년간 발간된 도서를 대상으로 373종에 대해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48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부터는 연간 사업으로 시행해 매년 9월 지원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학술진흥재단은 작년부터 5억 원의 예산을 늘려 동서양학술명저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이처럼 한국 학술전문도서 출판환경은 짧은 기간 동안 제도와 지원에서 큰 변화가 있었다. 특히 우수학술도서 지원은 출판사로서는 기쁨에 단비 같은 소식으로 가장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학술전문 출판사는 아예 문을 닫거나 발행종수를 줄이는 등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한 출판사 대표는 최근엔 초판을 500부만 찍는 경우도 많다고 털어놓는다. 이와 같은 경우 초판에 필자에게 돌아가는 인세는 없다. 출판사로서는 일년에 1,500부 이상 판매해 100퍼센트 수금을 해야 손익분기점을 넘길 수 있지만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1년간 판매량이 500부~1,000부가 안 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나마 필자는 출판의 필요성 때문에 인세를 포기하더라도 출판을 의뢰하게 되고 출판사로서는 그 중의 몇 권이라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될 경우 '뽀뽀(손익분기점)'를 맞출 수 있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는 실정이다.

결국 이처럼 위태롭게 학술전문도서 출판이 유지되는 이유는 출판의 근본적인 환경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김호기 교수는 우리나라의 학술전문도서 출판은 태생적으로 성장할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같은 경우 독서인구 자체가 많은 데다 아카데미 독자와 대중 독자의 구별이 확실해 굳이 대중들이 학술전문서적을 찾지 않아도 아카데미 독자들에서 충분히 수요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는 독서인구가 적고 그만큼 출판수요를 감당할 만한 전공자들도 많지 않다 보니 학술전문도서 출판이 활성화될 수 없다"는 것이다.

강희일 한국학술도서출판협회 명예회장 역시 "학술과학도서는 소비되는 기간이 긴 탓에 자금회전이 느려 출판사가 경영압박을 받기 쉽고 또한 소수의 전공자와 전문가만 책을 찾기 때문에 대량생산이 어려워 자연 책값이 높게 책정될 수밖에 없지만 불법복사복제가 성행해 적정한 책값을 산정하기 힘든 악순환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를 차치했을 때 학술전문출판이 안고 있는 문제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대학교육 정책 ▲불법복사 ▲도서관 정책 등이 그것이다.

대학교는 학문을 연구하는 곳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곳으로 전략한 지 오래고 불법복사는 계도와 홍보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업화 전문화 되어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학술전문도서의 가장 큰 수요처라 할 수 있는 도서관은 여전히 예산 부족으로 학술전문도서 구입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 외에도 정말 읽을 만한 학술도서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출판사의 기획력 부재와, 최근 교육부에서 출판을 연구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아 출판을 기피하고 논문을 선호하는 교수들의 학문풍토 등이 학술전문도서 출판을 저해하는 요소로 꼽히고 있다.

결국 학술전문도서 출판은 정부와 학계의 지원과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각 출판사들은 자생이라는 시장논리에 내맡겨져 있는 셈이다. 일례로 우리나라 대표적인 인문사회과학 전문출판사라고 할 수 있는 한울은 기존의 학술전문도서 출판의 한계를 절감하고 이를 새롭게 가공한 새로운 분야의 책을 올 하반기에 시장에 내놓을 계획이다. 한울 최병현 실장은 "기존의 도서를 기존 저자가 아닌 새로운 전문 필자를 동원해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책을 펴내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에 학술전문 출판사가 교재출판에서 자금수급처를 확보한 것에 비해 일반단행물이나 청소년 도서시장에서 이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자본력과 기획력을 갖춘 출판사의 경우 일반 단행본과 병행하며 학술출판을 지속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개점 휴업상태에 들어가거나 실용 등 다른 분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여러모로 학술전문출판 환경이 개선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 현실에서 학술전문도서 출판은 멀고도 험한 길임에 틀림없다. 과연 학술전문도서 출판은 어디로 갈 것인가. 물론 '이러다가 다른 출판에 묻혀버리는 게 아닌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하는 한 출판사 대표의 말은 기우다. 위기가 기회를 부르듯 '전자책 시장의 활성화', '온라인 즉시 출력시스템의 개발', '주문형 출판(POD=Print On Demand)' 등 지금까지와는 또 다른 출판환경이 형성되고 있다. 출판사쪽에서는 기존의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디지털, 네트워크 등 새로운 환경을 자신에게 유리한 환경으로 만들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이다. ■

취재 신동섭 기자 · 사진 박신우